



관세와 제재, 기술통제와 동맹 경쟁이 반복되는 현실은 “기술 경쟁이 곧 안보 경쟁”이라는 명제를 상수로 만들었고, 공급망 재편이 외교·경제 질서의 재구축과 직결됨을 확인시킨다. 따라서 중국 과학기술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지 특정 기술의 성능을 해설하는 차원을 넘어, 기술-산업-국가-국제질서가 어떻게 결합·작동하는지를 읽어내는 일이라 할 수 있다.

### » “기술이 국제질서를 바꾼다”

『2026 중국 과학기술의 부상과 미래전망』은 중국 과학기술의 ‘성취’만을 열거하는 보고서가 아니다. 이 책은 다음의 질문에서 출발한다.

- 중국은 어떤 방식으로 과학기술 역량을 축적하고, 이를 산업·안보·외교로 확장하는가?
-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속에서 한국은 어떤 협력·경쟁의 조합을 설계해야 하는가?
- AI·반도체·양자·바이오 등 전략기술에서 ‘협력의 정당성’과 ‘리스크 관리’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가?

기존의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한 시장진출형 협력” 또는 ‘안미경중’ 프레임이 한계를 드러낸 상황에서, 한국은 단순한 협력 확대가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받고 있다. 이 책은 그 대안을 ‘경쟁적 협력(competitive cooperation)’이라는 개념으로 정리하고 있다. 즉, 응용기술 경쟁을 인정하되 미래기술과 국제공공재 영역에서 협력의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설계하는 접근을 견지하고 있다.

### » “핵심 메시지를 중심으로, 4부·20편의 집단지성”

이 책은 특정 기관 또는 단일 전공의 시각에 갇히지 않기 위해, 다양한 저자군을 통해 현장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최선을 다했다. 특히 2·3부의 집필에는 중국 현지 교수진과 국내 주요 연구기관 연구자들이 참여하여, ‘중국 내부의 관측’과 ‘한국의 정책적 문제의식’을 결합했다. 서로 다른 전공의 20명이 함께 집필하는 과정은 관점과 언어의 차이를 조정해야 하는 큰 도전이었으나, 그 자체가 이 책의 품질을 규정하는 일종의 장치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구성 측면에서 이 책은 총 20편의 글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국의 과학기술 역량과 전망, 분야별 전략과 성과, 그리고 한중 과기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중심으로 4부 체계로 집필되었다.

1부는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중국 과학기술의 현주소와 미래 좌표를 짚는다. 중국 과학기술의

‘정량적 상승’이 어떤 정책·산업·인재 구조와 맞물려 있는지, 그리고 한국이 무엇을 관측하고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자 했다.

2부는 양자컴퓨팅, 신에너지·2차전지, 바이오파우드리·환경유전체, 반도체·고에너지·신소재, 항공우주 등 기초과학·원천기술의 생태계를 다룬다. 중국의 기초과학이 ‘장기투자-인프라-응용연계’로 전환되는 과정, 그리고 전략자원(희토류 등)·제조역량·표준화가 결합하는 구조를 독자가 입체적으로 읽어낼 수 있도록 구성했다.

3부는 Si와 AI 반도체, 휴머노이드, 디지털 공급망, 플랫폼의 글로벌화 등 디지털 분야의 전반적 흐름을 분석한다. 기술 그 자체의 발전을 넘어, Si가 산업을 재조직하고 공급망과 규범을 재편하는 방식을 ‘산업 논리’와 ‘정책 논리’의 접점에서 해설하고자 했다.

4부는 기술과 안보가 직결되는 국제정치학적 관점에서, 한국의 선택지를 ‘협력·경쟁·규범·리스크’의 언어로 재구성한다. 이 책이 지향하는 결론은 분명하다. 한중 과기협력은 더 이상 기술 교류에 머물 수 없으며, ‘기술-안보 일체화 시대’를 포괄하는 전략 모델로 재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 “과학기술이라 쓰고, ‘외교·안보’라고 읽는다”

오늘날 한국이 직면한 대중(對中) 과학기술 과제는 더 이상 ‘찬반’이나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다. 국제정치의 복합 위기 속에서 국가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려면, 현실을 고려한 실용적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관점을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한다.

외교·안보 영역에서는 이를 ‘작은 외교에서 큰 외교로’의 전환, 즉 국력에 걸맞은 자율성 확보와 가치·이익의 균형으로 설명한다. 이 책은 그 문제의식을 과학기술 영역으로 확장한다.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전면 협력” 또는 “전면 차단”의 이분법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선택적·전략적 협력과 규범·리스크 관리를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한중 관계에서 지속 가능한 소통과 제도화가 중요하다는 외교 분야의 통찰과도 맞닿아 있다.

## » “극단을 경계하는 ‘실리적 균형’—대체론이 아니라 전략론”

대외경제정책 논의에서 종종 등장하는 ‘대체론’은 매력적으로 들리지만, 복합 현실을 단순화하는 순간, 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중국 시장론을 둘러싼 논의에서도 “무리한 대체론”이 아니라 “국익에 기초한 실리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중국 과학기술을 바라보는 한국의 시각도 마찬가지다. ‘중국 배제’ 또는 ‘중국 의존’이라는 단순한 표어가 아니라, 분야별로 협력과 관리의 경계를 정교하게 설정하는 전략론이 요구된다. 이 책은 그 경계 설정의 기준을 다음 세 가지로 제시한다.

- 리스크 분산형 협력: 국제 공동연구 네트워크가 약화되는 환경에서, 연구자 교류를 넘어 국가 차원의 리스크 분산 협력이 필요하다.
- 개방-폐쇄 균형: 협력의 개방성을 유지하되,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전략적 폐쇄성’을 병행해야 한다.
- 상향식-하향식 결합: 연구자 중심의 상향식 교류와 정부 주도의 하향식 합의를 결합해 실행력을 확보해야 한다.

### » “정책결정-연구-산업현장을 연결하는 참고서”

이 책은 다음 독자를 염두에 두고 분야별로 집필이 되었다.

- 정책결정자/공공기관: 기술안보·국제협력·산업정책을 설계할 때 필요한 ‘중국 이해의 기준선’ 제공
- 연구자/대학원생: 분야별 기술 동향을 ‘국가전략’과 연결해 해석하는 분석 틀 제시
- 기업/산업 실무자: 공급망·표준·규범 변화 속에서 중국의 기술·산업 움직임을 구조적으로 파악
- 언론/일반 독자: 중국 과학기술 부상을 ‘사례’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이해하도록 돕는 입문서

특히 이 책은 “중국이 무엇을 잘하는가”뿐만 아니라 “한국은 어디에서 앞서고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가”, 나아가 “양국 간 협력과 경쟁의 프레임 2.0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정책과 현장의 언어를 접목하고자 했다.

### » 위중유기(危中有機)의 전략—위기 속에서 기회를 설계하다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협력은 더 어려워지지만 동시에 더 중요해진다. 미중 경쟁의 심화, 첨단기술의 안보화는 한중 협력에 위기이자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낙관도 비관도 아닌,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내는 지혜—위중유기(危中有機)의 관점이다. 이것이 이 책의 기획과 출판의 근본적 동기이기도 하다.

이 책이 제시하는 결론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전략 프레임이다.

한중 과학기술 협력은 '경쟁을 전제한 협력'으로 재설계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한국은 전략적 자율성과 국제적 정당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 그 출발점이 되는 공통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 『2026 중국 과학기술의 부상과 미래전망』이 독자에게 드리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다.

## 필자 소개

### 김준연

현재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장으로서 양국 간 과학기술교류협력과 전략을 지원하고 있다. 한양대학교에서 중국의 기술추격이라는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서 글로벌협력과 중국 관련 연구를 수행했으며, 과기정통부, 행안부, 외교부의 자문위원을 역임했고, 현대중국연구, Journal of Contemporary Aisa, Technological Forecasting & Social Change 등 국내외의 우수 저널에 다양한 중국 연구논문을 게재하였다. 저서로는 중국과 인도의 혁신과 추격(2013), 미중경쟁과 글로벌 디지털 거버넌스(2020), 한국경제대전망(2025) 등이 있다.